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국가인재를 찾습니다

국민추천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장·차관 등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추천해 주십시오.

- | 직 위 |** 중앙부처 장·차관(정무직)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 | 대 상 |** 직위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인재(공무원 포함)
- | 시 기 |** 언제나
- | 방 법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hrdb.go.kr)를 방문하여 주변
인물을 추천(타천)하거나 본인을 추천(자천)
- | 활 용 |** 사실 확인, 적합성 판단 등의 절차를 거쳐 공직후보자로 선별 · 관리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Human Resources Database

CONTENTS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5 11+12 vol.47



발행일 2015년 12월 1일 (격월간, 비매품)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이성보 **편집인** 임윤주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전화 044,200,7075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www.eepop.co.kr



Special Theme

- 04 **스페셜 1** 권익위,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다
- 08 **스페셜 2** 국민권익 찾아준 행정심판, 국민에 더 가까이!
- 12 **스페셜 3** 문답으로 알아보는 행정심판 ABC
- 14 **연중기획** 권익위와 함께 간다
노부부에게 찾아온 따뜻한 겨울



소통 공감

- 16 **현장 24시** 민생 속으로 찾아가는 권익위,
약자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어갑니다
- 20 **반부패 주간** 생활 속 더 가까이 청렴 문화를 실천합니다
- 22 **이슈 포커스**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열린 소통의 장, 이동신문고
- 26 **권익위가 간다** 역주행 교통사고 문제를 관계기관 공동으로 해결하다
- 28 **국민권익 Q&A** 부당한 국민권익 침해, 권익위가 앞장서 지켜냅니다
- 30 **행복 공감** 민간기업과 함께 공정한 사회 추진동력 끌어올린다
- 32 **핫 민원 키워드** 중고차 똑똑하게 구입하려면 확인 또 확인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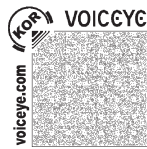


행복 나눔

- 36 **청렴 토크**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꿈꿉니다
- 40 **맛있는 초대** 참샘 자극! 바다에서 온 겨울 진미 '굴'과 '매생이'
- 42 **문화 레시피** 손이 공공? 문화생활로 명랑하게 겨울나기
- 44 **똑똑! 생활법률** 알쏭달쏭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법규,
제대로 묻고 살피고 따져보자
- 46 **꼭 알아두세요!** 한눈에 살펴보는 노동개혁 알짜상식
- 48 **ACRC News**
- 50 **독자 옴부즈만**

글:
이종철 기자

자료:
국제교류담당관실



권익위,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다

유엔부패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및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참석



▶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11월 2~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6차 유엔부패방지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권익위가 11월에 열린 제6차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당사국 총회와 제14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에 참석했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그동안 권익위가 수행해온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면서 부패방지와 민원 해소에 노력한 성과와 국제협력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의 부패방지 활동 성과를 널리 소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레넥스포 회의장에서 제6차 유엔부패방지협약(이하 UNCAC) 당사국 총회가 개최됐다. 우리나라 정부의 수석대표인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해 160여 개국 대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등 국제기구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의 국제행사였다.

이성보 위원장은 11월 2일 개회식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기조발언을 통해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의 목표에 ‘반부패’가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당사국들이 부패의 범죄화, 법집행 및 국제협력 분야에서 협약의 목표 실현을 위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각국의 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각국 정부대표 연설 세션에서 이성보 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추진, 정기 ‘외국인 청렴교육과정’ 운영, UNDP·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등 우리 정부의 최근 유엔부패방지협약 이행 노력을 소개했다.



▶ 유엔부패방지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이성보 위원장이 11월 3일 멕시코 공공행정부 장관과 면담했다.

“

권익위는 유엔부패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강력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한국의 반부패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과 높은 관심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한국의 반부패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폭

11월 3일에는 이성보 위원장과 비르힐리오 안드라데 멕시코 공공행정부 장관의 면담이 진행됐다. 멕시코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성보 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청렴도 측정, 청렴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제도와 ‘청탁금지법’ 및 ‘부정환수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안드라데 장관은 한국의 반부패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찬사를 보내면서 “매우 효율적이며 유용한 제도이며, 멕시코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교육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엘버트 카와나 나미비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쿠웨이트·네팔·폴란드 등 각국 대표들도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 등 반부패 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관련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11월 6일에는 현재 권익위가 UNDP 서울정책센터와 공동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를 베트남에 전수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반부패 기술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띠 띠 뚜이 베트남 감찰원 부원장의 요청으로 협의가 있었다. 권익위 대표단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매뉴얼의 베트남어 번역이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오는 12월 14일 권익위와 UNDP 서울정책센터 관계자가 베트남을 방문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베트남 측은 권익위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한국과 같이 베트남에서도 공직사회의 청렴도 개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으며, 베트남 연수와 관련해서는 향후 연수 프로그램 구성, 참석대상 등에 관해 조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패방지에 대한 앞선 노하우를 공유하다

권익위 대표단은 11월 3일 UNODC와 OECD가 공동 주최한 ‘부패 신고자 보호 특별회의’에서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UNODC 대표는 이날 UNODC가 공식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 안내서」에 한국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수록된 사실을 언급했고, OECD 대표는 OECD 회원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사례를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각국 참석자들은 권익위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한국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11월 5일에는 UNDP의 초청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심사’에 대한 특별회의에 참석해 ‘부패영향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필 메이슨 영국 국제개발부(DFID) 반부패 선임 자문관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회의는 권익위 외에 Regional Anti-corruption Initiative(동유럽 9개국으로 구성된 반부패 지역기구), ANTICORRP(EU 지원 반부패 연구 프로젝트), 몰도바 국가반부패센터 대표 등이 참석해 효과적인 부패방지 법령심사 방안 등에 논의했다.



▶ 이성보 위원장이 11월 23~25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에 참석했다.

권익위는 ‘부패영향평가’가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소개하고, 평가대상과 운영 체계, 평가기준과 평가절차, 주요 사례 등을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이렇듯 권익위는 이번 UNCAC 당사국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기조발언, 정부대표 기조연설, 자산회복을 위한 국제협력 성과 소개, 신고자 보호제도 주제발표 등을 통해 유엔부패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강력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과 높은 관심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으로 협약 이행점검 제2주기가 개시되는 2016년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협약 제2장(예방조치)과 제5장(자산회복)에 관련한 우리나라 대상의 이행 점검 사항에 면밀히 대비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주기 이행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현황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각국의 기술지원 요청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에 참석하다

권익위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14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이하 AOA) 총회에 참석했다.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는 아시아 지역 내 옴부즈만 기관 대표가 참석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경험을 공유하고 협회 규정과 운영규칙 개정, 협회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행사다. 이번 총회는 한국을 비롯해 태국·홍콩·중국·이란·일본·말레이시아 등 22개국 36개 옴부즈만 기관장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아시아 국가들의 민원 처리(옴부즈만)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AOA 회원국 22개 국 36개 고충처리기관 대표가 모인 이번 총회에서는 4개 세션의 컨퍼런스에서 ‘옴부즈만의 비밀성 vs. 투명성’,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 국가 거버넌스를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 옴부즈만의 효율적·전문적 기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성보 위원장은 총회에서 AOA 규정과 운영규칙 개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AOA 재무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유엔부패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유엔부패방지협약은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아우르고, 부패 예방, 범죄화·법집행, 자산회복, 국제협력 등 종합적 접근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대의 국제 반부패 규범으로, 2005년 12월 14일에 발효되어 올해로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4월 26일 이를 발효하였으며, 11월 말 기준 협약 당사국은 총 177개국이다. 유엔부패방지협약은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한국을 포함한 90여 개국이 서명했으며, 이날을 기념해 유엔은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했다.

아시아옴부즈만협회 Asian Ombudsman Association

아시아옴부즈만협회는 아시아에 소재한 옴부즈만과 각종 감찰기구, 기타 행정민원 처리기관들이 자국의 고충민원 처리업무 관련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기 위해 1996년에 설립했으며, 매년 이사회를 개최하고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AOA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클.
윤진아 기자

사진.
정준택(fun studio)



행정기관

국민권의 찾아준 행정심판, 국민에 더 가까이!

행정심판이 올해로 30돌을 맞았다. 지금까지는 독립성 확보와 실효성 강화로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더 널리 쓰이는 제도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터다. 행정심판의 지난 30년 발자취를 살펴보고,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30년을 이야기한다.

국민권의 구제와 법치 행정 구현에 앞장서 온 행정심판의 30년

행정심판제도는 1985년 시작된 이래 약 10년 안팎의 주기로 큰 전환점을 거치며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전에 행정심판제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원 제도가 있었지만(1951년 ‘소원법’ 제정), 1964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하위법령이 마련되었고, 1980년 소원법 개정으로 처음 ‘행정심판’이라는 용어가 헌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으나 소원 심의회가 재결청의 자문기관에 불과했고, 심의위원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등 실질적 권익구제 기능은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

이에 1984년, 소원법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행정심판법이 제정됐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의결기관으로 격상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 절차를 최대한 사법절차와 가깝게 설계하여 절차적인 권리 신장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이때 제정된 행정심판법은 1985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초기 10년간은 연평균 489건 접수, 21.7%의 인용률을 기록하며 공정성을 갖춘 국민권의 구제제도로서 첫 뿌리를 튼튼히 내렸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행정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행정 절차가 복잡다단해지는 한편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1995년 행정심판법이 큰 폭으로 개정됐다. 각부장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한곳으로 통합하고, 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과반수로 늘렸으며, 처분청 경유제도를 폐지하고, 처분청의 재결 미이행 시 재결청이 직접 처분토록 하는 등 개정된 법에 따라 행정심판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됐다. 제도 개선 후 행정심판청구사건은 10년 만에 20,487건으로 500%가 증가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008년에는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국민권익보호 창구가 일원화됐다. 동시에 다시 한번 법 개정을 실시하면서 행정심판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다. 가장 큰 변화는 재결청의 개념을 없애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재결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청 등 관련 기관의 구조가 복잡해서 발생한 혼선, 시간적·절차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로써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기관이 됨으로써 그 성격이 의결기관에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바뀌게 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 명실상부한 권리구제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서 국민권리를 지켜온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연간 청구 건수는 2010년에 최초로 3만 건을 돌파한 이래, 계속적으로 우리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총 25,301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됐으며, 이 중 16.3%인 4,131건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됐다.

최근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는 손길이 물리적 거리를 초월해 현장 어디에나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각 지역을 순회 방문해 구술 청취와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익구제 사각지대의 한계를 해소하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온라인 행정심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십 군데에 달하는 행정심판 소관위원회에 관계없이 www.simpan.go.kr이라는 단일 창구에서 청구에서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듯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한 행정심판이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행정심판은 앞으로도 친 서민 권익구제 제도로서 늘 국민의 편에서 부당함과 억울함을 해소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
1985년 10월에 만들어진 행정심판제도는 10년 안팎의 주기로 큰 전환점을 거치며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

누구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만나는 온라인 행정심판

2014년 2월에 구축된 온라인 행정심판은 국민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흩어져있는 수십 군데의 소관 기관에 무관하게 청구부터 재결까지 행정심판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하다.

온라인 행정심판 도입 이전, 다양한 행정처분을 수십 군데의 위원회가 각각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민들은 직접 소관 위원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간 인용률 편차로 인해 거주 지역에 따라 권리구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구인에게는 온라인 통합 창구를 제공하고, 기관들은 유사한 재결례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됐다. 그러나 가장 많은 행정심판을 소화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2006년부터 온라인으로 사건 접수·처리를 시작했고, 여타 심판 기관들은 현실적으로 시스템 마련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 된 이래 행정심판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재결청의 개념을 없애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재결하게 되면서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

이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소관기관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을
간편하고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심판업무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 심판기관들에 이를 보급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현재
는 전체 행정심판위원회 중 일부인 총 21개 기관에서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다. 앞
으로 전국 모든 국민들이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상기관을 확
대해나가고 있으며, 2016년 1월에는 총 43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해 누구나 더욱 편리하게
온라인 행정심판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 행정심판에서는 구체적으로 ▲청구 전 참조할 수 있는 유사사건에 대한 재결례 · 판
례 · 상담사례 등에 대한 법률지식정보 ▲청구서 작성지원 등 맞춤형 지식 DB 구축을 통한
상황별 도우미 서비스 ▲보충서면 등 제출 및 본안 사건과 각종 신청에 대한 진행 상황조회
서비스 ▲재결서 등 전자문서의 온라인 수령 및 발급 서비스 ▲청구인의 직접 문의, 검색에
대해 즉시 응답하는 상담지원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온라인에서 유사 사
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청구를 완료할
수 있으며, 이후 재결 결과 확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신속편리함을 더할 뿐 아니라, 행정심판
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 위원회간 편차를 해소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새
로운 패러다임인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이 크게 도약하리라 기대한다.



행정심판 시행 30주년 기념

2015년 국제 행정심판 심포지엄 개최

11월 4일 권익위가 한국법제연구원, (사)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5년 국제 행정
심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정심판법 시행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시아의 대표적 행정
심판제도 운영국인 중국, 일본과 더불어 우리 제도에 대한 연구와 도입을 검토 중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의 고위공직
자와 학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아시아 각국 행정심판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아직 행정심판제도를 도
입하지 않은 나라에 행정심판제도를 소개했다.

권익위 홍성철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그간 우리 행정심판제도는 나날이 신장하는 국민 권리의식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권익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IT 기반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왔다"며 "국제 심포지엄은 이런 우리 행정심판제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한편, 각국의 행정심판
제도를 비롯해 권익구제 시스템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참가국 공동의 발전적 미래를 그려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첫 순서로 우리나라와 중국 ·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의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비교와 함께 행정심판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의 국가에 우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국민 권리구제 시스템인
행정심판제도를 우즈베키스탄이나 베트남 등 이웃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
다. 이진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적개발원조(ODA)에는 이웃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현금, 물자 제공뿐만 아니라 사
회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 소개와 도입 지원도 포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 나라의 제도가 다른 나라에 수
출돼 토착화되고 발전하려면 제도 자체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상황적 유사성도 확보돼야 한다"며 "우즈베키스탄이나 베트
남은 행정심판법 제정 · 시행 당시의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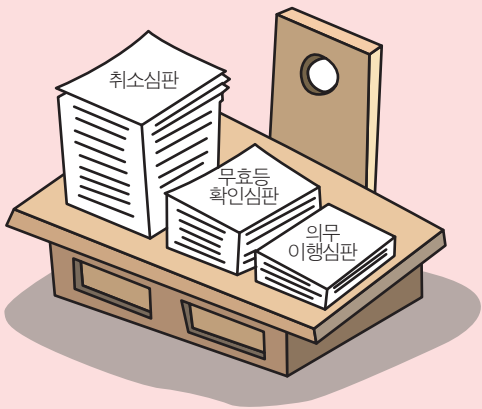
한편 국세기본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특별행정심판을 하나의 행정심판절차로 개편하고 심판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주목받았다. 기관별로 특별행정심판제도 절차가 달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
다. 정태용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특별행정심판의 절차를 정비하고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행정심판을 하나의 행정심판 절차로 개편하고 '행정심판소(가칭)'로 심판기관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통합되는 심판기관 간 기능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야별로 전담조직(심판부)을 두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행정부
내에서 권리와 이익을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권의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이 무엇보다도 국민 입장
에서 신속 · 간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개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1985년 10월 1일 첫 시행 이후 행정심판법은 1995년, 2008년 두 차례 개정돼 각부 장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일원화,
처분청 경유제도 폐지, 행정심판위원회 직접 재결 등을 실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2010년 최초로 연간 청구 건수
3만 건을 돌파한 이래 행정심판은 꾸준히 국민의 권리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홍성철 부위원장은 "지닌해
에만 2만5301건의 행정심판 청구건 중 4131건이 구제됐다. 이는 4,131명의 국민이 행정심판으로 억울함을 씻은 것이지
만, 반대로 그만큼 행정기관들의 잘못된 처분이 비일비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역설하며, "지닌해 도입해 확대시행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으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행정심판 ABC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며 비용도 무료라는 점에서 반가운 존재다. 생활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을 자세히 알아본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세 가지의 심판 중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것이 취소심판이다.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행정처분은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행정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행정심판이다. 행정심판의 결정은 처분기관에 기속력을 가지므로 법적인 구제가 가능하면서도 법원의 행정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사법부(법원)에서는 ‘위법성’만을 심사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과는 달리,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모두 심사해 준사법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적법성 외에 합목적성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행정청에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도로교통법, 그리고 국세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무조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만일 행정심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지 못했을 때 차후 단계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행정심판, 어떻게 청구할까?

① 서면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서울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세종청사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행정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 포털 사이트 ‘권리누리’(http://www.simpan.go.kr)의

지식서비스 ▶ 서식모음 ▶ 행정심판 서식 메뉴에서 다운로드 작성하거나, 처분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서울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세종청사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교부받아 작성하면 된다.

②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온라인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사건 중 운전면허처분 관련 사건, 보훈처분

관련 사건, 산재·고용보험료 부과처분 관련 사건 등 청구건수가 많고 처분청의 업무환경이

뒷받침되는 사건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행정심판 포털 사이트 <권리누리> www.simpan.go.kr

info

알아두면 좋은 행정심판 용어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하지 않는 것

재결(裁決) :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관할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개인 자격을 가진 사람)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노부부에게 찾아 온
따뜻한 겨울

겨울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더 혹독한 계절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몸이 위축되다 보니 마음도 점점 세상과 벽을 쌓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려움에 공감해주며 손을 잡아주는 것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권익위의 이동신문고가 전국을 누비며 이웃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사정을 듣고 필요한 혜택을 지원하는 일, 권익위는 나눔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웃의 삶에 온기를 더하고자 합니다.

이번 호 <국민권익>에서 만난 분은 몸이 불편해 식사를 챙기는 것조차 어려운 노부부입니다. 두 분 모두 거동조차 힘든 상태라 매 끼니 챙기는 일이 버겁지만 합니다. 치아도 좋지 않아 음식을 씹기도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두 분의 딱한 상황을 접한 권익위는 어르신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지역 내 한우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해 한 달에 두 번씩, 사골곰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8kg의 사골곰국 2팩이면 2주 정도는 끼니, 반찬 걱정이 덜할 것입니다. 영양도 챙기지 못하는 형편이기에 사골곰국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도움에도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이웃들에게 권익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하려 합니다. 나눔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데에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든든한 밑바탕이 됩니다. <국민권익>을 읽으신 후 편집실로 엽서를 보내주세요. 엽서의 숫자만큼 금액을 적립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온기 넘치는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아흔이 될 할머니입니다. 6년 전 의자에서 넘어져 허리와 고관절에 부상을 입었는데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더니 뼈가 약해 수술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허리가 아프니 하루 세끼 식사를 챙기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옆친 데 딸친 격으로 남편이 작년 여름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아픈 상태로 지내니 건강은 더 악화됐지요. 치아가 좋지 않아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기에 점점 몸도 말라갔습니다. 방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데 밥도 챙겨 먹지 못하니 저희 두 사람은 시설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답답하더라도 그저 남편과 제가 식사만 제때 챙겨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0월에 정읍시청에서 열린 이동신문고를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허리 부상과 치아 상태 때문에 음식 먹기가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사정을 알고 권익위에서 사골곰국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국물을 데워 밥을 말아 한 숟가락 떠먹으면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희 부부가 올 겨울을 조금 더 든든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준 권익위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통 공감

- 16 **현장 24시** 민생 속으로 찾아가는 권익위, 약자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어갑니다
- 20 **세계 반부패의 날** 생활 속 더 가까이 청렴 문화를 실천합니다
- 22 **이슈 포커스**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열린 소통의 장, 이동신문고
- 26 **권익위가 간다** 역주행 교통사고 문제를 관계기관 공동으로 해결하다
- 28 **국민권익 Q&A** 부당한 국민권익 침해, 권익위가 앞장서 지켜냅니다
- 30 **행복 공감** 민간기업과 함께 공정한 사회 추진동력 끌어올린다
- 32 **핫 민원 키워드** 중고차 똑똑하게 구입하려면 확인 또 확인은 필수!



민생 속으로 찾아가는
권익위,

약자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민권익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온 권익위는 이동신문고와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그동안 도시에 비해 소외받았던 지역을 찾아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국민고충 해결에 발 벗고 나서왔다. 국민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온 그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이동신문고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간기관과의 협업으로 생활고충 해결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2003년 4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실시 횟수를 늘려가며 2015년 10월 31일까지 총 381회, 12,754건의 상담실적을 거둔 이동신문고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충이 있어도 해결할 방법이 막막했던 여러 가지 숙원사항을 속 시원히 해결해준 반가운 존재였다. 이동신문고는 2015년 10월 31일 기준 37.2%의 현장 해결률을 달성하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제도로 인정받으면서 권익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현재 이동신문고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과, 소상공인·중소기업·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주거밀집지역 등 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이동신문고 운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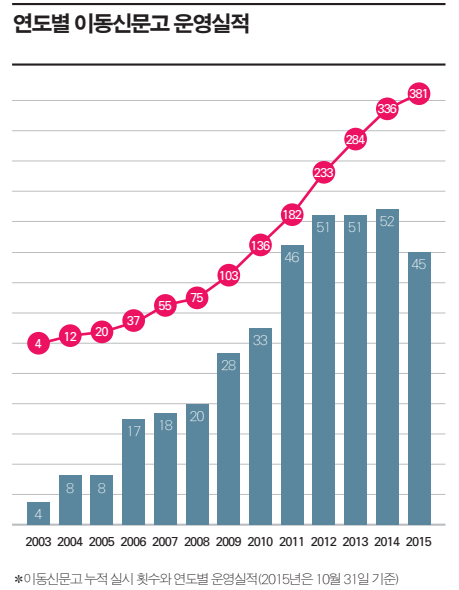
권익위는 올해에도 현장방문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왔다. 다양한 민원 해결 사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매월 2~3개 지역을 순회 방문했으며, 사회 이슈 현장이나 주거 취약 지역,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쪽방촌, 공공사업 갈등 현장 등을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이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2013년 18개 지역에서 2015년에는 27개 지역으로 확대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21회 동안 841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해결한 민원은 359건으로 전체 상담실적 중 42.7%에 이르렀다.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사례는 129건이었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24회가 이루어졌고, 565건의 상담 중 164건이 현장 해결되어 29%의 해결률을 보였다. 고충민원은 모두 82건이 접수됐다.

고충민원의 원만한 해결 꾀하는 현장조정회의

국민의 생활 터전을 찾아가 민원을 청취하는 이동신문고와, 범정부적인 민원 통합 서비스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주민과 관계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은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합의·조정을 이끌어낸다. 즉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권익위는 사전 현장조사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도출된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법률적인 효력을 완성시키게 된다. 현장조정회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160건의 현장조정회의가 개최됐고, 이중 완결 처리된 것이 66건, 합의를 통해 처리중이거나 당사자 간 협의단계인 것은 85건으로써 조정률이 높은 편이다.



권익위는 현장방문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왔다. 국민의 생활 터전을 찾아가 민원을 청취하는 이동신문고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주민과 관계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은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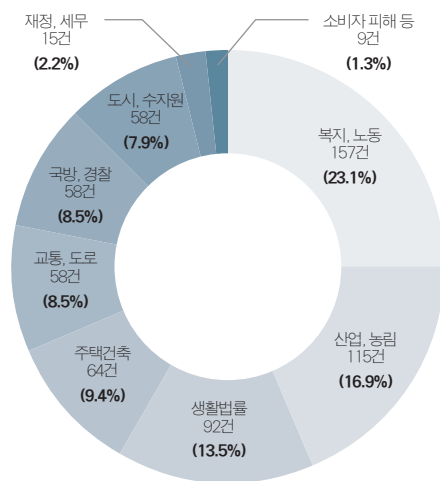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권익위

2015년 상반기의 경우 681건의 이동신문고 상담 결과를 살펴보면, '복지·노동' 분야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산업·농림 115건, 생활법률 92건, 주택·건축 64건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신문고와 다문화 가정, 임대주택 임차인, 외국인·일용직 근로자 등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과 애로사항 청취·해결을 위한 기업 옴부즈만, 군장병 권익보호를 위한 군 옴부즈만, 공공기관 건설공사 등 계약관련 고충 해결과 조정을 위한 전담반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신문고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가 관계되거나 다수인의 이해가 관련된 현장 등 어디라도 찾아가서 이견을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행복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2015년 상반기 이동신문고 분야별 상담 현황



민생 결으로 찾아간

권익위의 현장 속 2015



1월 23일 충남 예산군 이동신문고 운영시 예산읍 창소리 과선교 철거 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를 도출해냈다.



권익위는 2월 13일 울산혁신도시사업단 회의실에서 원활한 진출입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민원을 중재했다.



5월 21일 용인시청에서 진행된 이동신문고에서 민원상담 중인 권익위 조사관들



권익위 조사관들이 5월 22일 평택시청에서 지역민들의 고충을 상담해주고 있다.



7월 23일 구미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고충상담을 실시했다.



8월 26일 경주시 광명4동 마을 주민들의 동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권익위는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소음분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9월 4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현장민원 상담 해결사,

권익위가 간다!

해묵은 집단갈등, 민원 조정으로 해결



① **충남 예산군 과선교 철거로 도시 균형발전 및 교통사고 예방** 철도 과선교(창소육교)로 인해 25년 동안 마을 간 생활권이 단절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500여 명의 집단 민원에 대해 육교 철거와 도로구조 변경 등 개선작업을 하도록 해결했다.

② **경북 안동시 군자마을 문화재 중건 요구** 1976년 안동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되어 이주된 군자마을의 후조당 종택(중요민속문화재 제227호) 안채 복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했지만, 관련 법령상 규제로 인해 복원에 어려움을 겪던 중 권익위가 나서서 문화재 중건안을 제시했다.

③ **경기도 용인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군 부동의 해결 요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업이 중단된 '용인 둔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군 작전수행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재심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선 권익위



① **남편과 별거 중인 다문화 모자 가정 겨울철 난방비 지원** 남편의 폭력과 가정불화로 이혼한 후 화장품 판매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홀로

자녀를키우고 있던 중국계 이민여성 가정과, 남편과 별거 후 두 자녀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던 베트남계 결혼 이민여성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를 긴급 지원했다.

② **생활고를 겪고 있는 빈곤가정 생필품 긴급지원**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을 대신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느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가정에 생필품(세탁기)을 지원했다.

③ **긴급히 수술비가 필요한 중증장애아 가정 수술비 지원**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 수술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정에 대해, 지역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사업단과 함께 개최한 일일차집 수익금을 전달했다.

④ **생계가 곤란한 노인세대에 의료비 지원** 고령과 병환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두 명의 손자를 부양하고 있던 가정에 난방비와 생필품을 지원했다. 또 치매와 파킨스병을 앓던 고령의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노인 세대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⑤ **복지소외계층 생활고충 해소** 다문화 가정, 한부모·독거노인 가정, 조손·장애인 가정 등에 생필품,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했다.



생활 속 더 가까이 청렴 문화를 실천합니다

권익위는 2009년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12월 1일부터 9일까지 '반부패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반부패 주간에는 청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그 행사 프로그램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권익위는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매년 12월 9일)*'을 기념해 올해 12월 1일부터 9일까지를 '반부패 주간'으로 설정하고, 반부패 국제 협력 행사와 반부패 사업 추진성과 발표, 고3학생 청렴교실 운영 및 지역별 캠페인 실시 등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반부패 주간은 2009년 정부차원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사회 각 계각층이 청렴문화 조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UN 반부패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청렴 문화 확산의 통로, 반부패 주간

권익위는 반부패 주간을 통해 그동안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정책협의회(12월 3~4일) 등을 개최했다. 또 권익위를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의 올해 주요 반부패 성과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 발간·배포(12월 7일),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12월 9일) 등으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지역별 캠페인(12월 7~12일),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12월 7일), 시민문화마당(12월 7일) 등 다양한 반부패 행사가 진행되며, 공공기관 청렴옴부즈만 협의회 창립식, 고3학생 청렴교실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여러분도
참여해
보세요

반부패 국제 협력

- ① **정책협의회 및 공동 반부패 워크숍** : 12월 3~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협력사업의 협의하고 반부패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 ② **한-인니 반부패 권익위-UNDP 반부패 협력 MOU 체결 기념행사 개최** : 12월 4일 서울 파인스센터에서는 개도국 대상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된다.
- ③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총회 참석** : 12월 9~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IACA 활동 보고, 이사 선출, 우수반부패 정책 공유 등의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 ④ **반부패 준법 이태지역 고위급 회담 참석** : 12월 10~11일 홍콩에서 열리는 회담으로, 반부패 입법전략과 국제공조 노력 등의 주제로 토론을 갖는다.

부패방지 성과 집중 홍보

- ① **반부패 주간 보도자료 배포** : 12월 1일 반부패 주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반부패의 날 유래, 주요 반부패 사업성과 및 주요 행사에 대한 언론 홍보가 진행된다.
- ② **법정부적 반부패 시책 추진성과 집중홍보 유도** :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홍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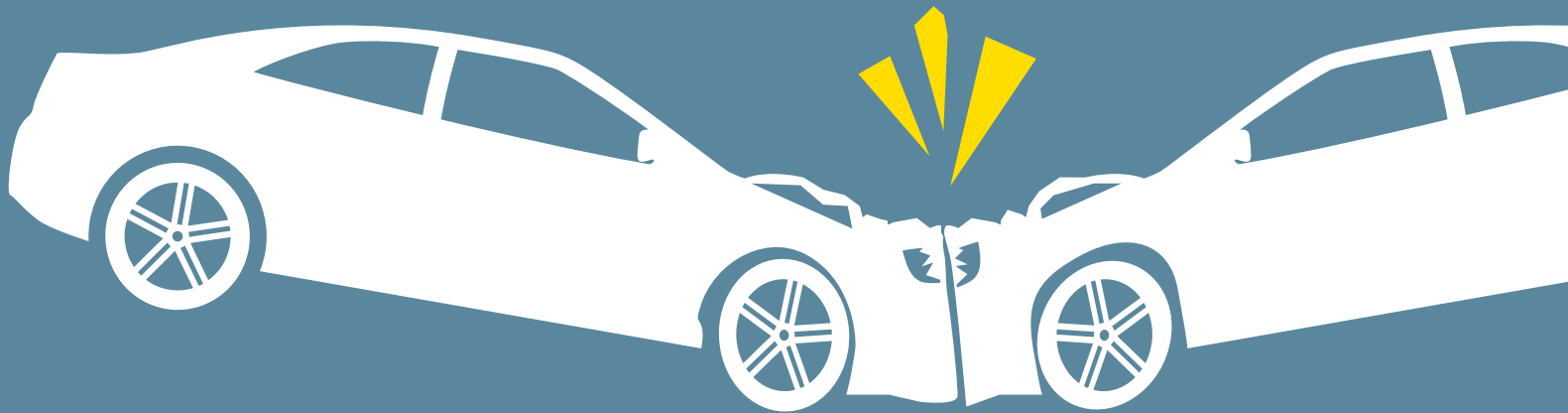
주요 반부패 사업 추진성과 발표

- ①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 12월 9일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된다(국공립대학(35개), 공공의료기관(45개), 지방의회(62개) 측정 결과는 별도 발표).
- ②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 및 성과 발표** : 공익신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영상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내용 홍보영상이 배포된다. 또 부패·공익 신고자 보상사건의 분야별·기관별·유형별 분석결과와 보상금제도 운영현황 등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 ③ **행동강령 우수사례 발굴·전파** :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이 배포되고, 고위직 외부강의·경조사 관련 수범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 ④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안 발표** : 현행 법령 부패 영향 평가(하천수 사용료 및 하천 관리의 공정·투명성 제고)와 부패방지 제도개선안(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을 발표한다.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 ①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지역별 캠페인('다함께 더 맑게') 실시** : 12월 7~12일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사회, 공공기관, 지역, 직능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개최한다.
- ② **공공기관 청렴옴부즈만 협의회 출범식** : 12월 9일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청렴옴부즈만 협의회 창립 행사가 열린다.
- ③ **시민문화마당** : 12월 7일 세종정부청사 6동 대강당에서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콘서트, 청렴 마당극이 진행된다.
- ④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 12월 7일 세종정부청사 6동 대강당에서 청렴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식이 열린다. 수기, 논문, UCC, 포스터, 웹툰 등 9개 분야에서 총 61명이 수상할 예정이다.
- ⑤ **고3학생 청렴교실 운영** :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세종시와 청주시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뮤지컬, 청렴 판소리 등 청렴인식 향상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UN은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Merida)에서 「UN 반부패 협약」 조인식이 개최된 것을 기념해 매년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역주행 교통사고 문제를 관계기관 공동으로 해결하다

OECD 최하위 교통사고 위험 수준, 기관 간 협업으로 해결 모색

한국은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다. 2012년(가장 최근 통계) 기준 인구 10만명당 연간 110명이 사상하며 OECD 평균 65명의 1.7배 수준으로 국민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는 민원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3년간(2013. 2. ~ 2015. 10.)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통사고 민원은 96,201건이고, 특히 역주행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934건(금년 324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잘못된 도로 및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은 특정기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 즉 역주행 교통사고 발생 지점을 파악하는 일, 문제 지점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 개선방안을 시행하는 일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업무이다. 따라서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 각 기관에 주어진 여러 기능의 유기적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은 곤란하다.”

권익위는 기관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역주행 교통사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조사 빅데이터를 분석해 문제지점을 파악했고, 도로교통공단은 사고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문제 지점에 대해 현장실사 및 전문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안)을 작성했으며, 개선방안(안)은 관할 도로관리청과 경찰관서에서 검토하여 보완했다. 그렇게 하여 마련된 최종 개선방안을 가지고 10월 2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역주행 교통사고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에는 경찰청과 지자체 등 교통안전 소관기관과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 부처가 참석해 역주행 교통사고 우려지점의 개선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정부 3.0의 협업의 소산이며 적극 행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주행 교통사고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경과

- 5. 13. ~ 7. 31. 최근 3년(2012년 ~ 2014년)간 176개 지점의 치명적인 역주행 교통사고 발생 확인
- 8. 1. ~ 9. 15. 현장실사 · 사고원인 분석, 64개 지점의 개선방안 마련
- 9. 16. ~ 10. 15. 개선방안(초안)에 대한 실무검토
⇒ 개선방안 공동 발표(10. 29.), 2015년 연말까지 대부분의 문제지점 개선 추진완료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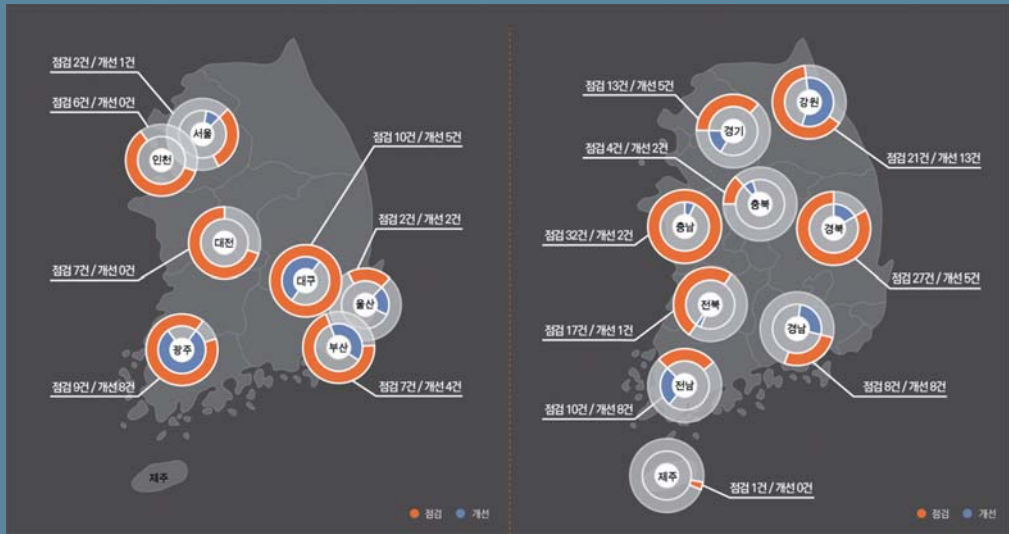
운전자 탓만 하는 반쪽짜리 대책, 시설개선 필요

역주행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최근 3년(2012~2014년)간 1,408건의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526명이 사상(82명 사망) 했고, 2014년 기준 교통사고 100건당 일반 교통사고는 사망률이 2.1명이지만 역주행 교통사고는 7.0명으로 3.3배 수준이다.

그동안 이같이 치명적인 역주행 교통사고의 개선이 다소 소홀했던 것은 운전부주의 등 인적요인 위주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치명적 역주행 교통사고 176건 관련, 운전부주의 103건(58.5%), 음주운전 63건(35.8%), 만취 · 도주운전 8건(4.5%) 등으로 운전자 이외 요인을 사고원인으로 분석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언론에서도 역주행 교통사고에 대해 단순히 ‘운전자 요인’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역주행 교통사고 개선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시설개선은 그 자체의 효과 이외에도 운전자의 주의력을 향상시켜 인적요인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사고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이 중시됐다. 경찰청에서 파악한 176개 사고위험지점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전문가의 현장 실사 및 사고요인분석 결과, 64개 지점의 경우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13곳, 광주 · 전남 · 경남이 각 8곳, 대구 · 경기 · 경북이 각 5곳, 부산 4곳 등이고, 유형별로 보면 진입로 23개소, 교차로 32개소, 도로구간 9개소이다.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은 특정기관 단독이 아닌, 서로 다른 기관에서 제각각 추진해야 할 업무다. 따라서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 각 기관에 주어진 여러 기능의 유기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역주행 진입위험 지점별로 여건에 적합한 시설개선 추진

역주행 교통사고 개선은 역주행으로 차량이 진입한 지점에 대해서 차량이 다시는 진입을 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또는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역주행 진입위험 지점 64개소에 대해, 교통안전 시설 241개, 통행분리시설 38개, 도로안내시설 15개 등 총 294개 시설을 개선하여 지점별 평균 4.6개의 시설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64개 지점의 개선사항별 개선점

(단위: 개)

구분	세부 개선사항
교통안전시설(241)	노면표시(125), 안내표지(115), 신호등(1)
통행분리시설(38)	시선 유도봉(26), 표지병(3), 중앙분리대(6), 교통섬(2), 연석 · 가드레일(1)
도로안내시설(15)	도로표지(6), 갈매기 표지(2), 교차로 신설 · 개선(3), 재도색(4)

개선지점 유형별 시설개선 분석

(단위: 개)

개선지점	개선시설			
	계	교통안전시설	통행분리시설	도로안내시설
진입로 (23개소)	97	75	18	4
교차로 (32개소)	145	125	12	8
도로구간 (9개소)	52	41	8	3
전체 (64개소)	294	241	38	15

(문제점) 좌회전 금지표지 식별 곤란	(개선) 발광형 표지설치 및 노면표시 개선
(문제점) 교차로 면적이 넓고, 선형이 기형적	(개선) 교차로 면적 축소, 선형 재설계

21개 지자체, 11개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34개 도로관리 관계기관에서는 64개소 지점에 대한 개선을 가급적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경우에 2016년 사업에 반영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김인수 부위원장은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 “이번에 특정 기관에서 단독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정보공유와 각급 기관의 협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교통안전 관련 민원에 대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국민생활 안전과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교통안전 과제에 대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동안 역주행 교통사고의 개선이 소홀했던 것은 운전부주의 등 인적요인 위주로 사고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도 역주행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요인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역주행 교통사고 개선방안에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향상시켜 인적요인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권익위는 지난 10월 전북 정읍시를 시작으로 전주시와 무주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국민의 고충을 듣고자 직접 찾아가 이번 이동신문고는 생활불편에서부터 복지, 교통, 환경 등 여러 분야 민원들을 접수하고 현장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이지만 어느 날보다 포근한 분위기로 치러진 이동신문고 현장을 소개한다.

전북지역 이동신문고 현장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열린 소통의 장

권익위는 10월 21일 전북 정읍시를 시작으로 22일에는 전주시, 23일에는 무주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모두 102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이중 35건이 해결돼 현장 해결률 34.3%의 결과를 보였다. 민원 중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민원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농림 분야 민원이 18건, 생활법률 분야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도로와 행정·문화 분야도 각각 12건, 10건으로 많은 편이었다. 이동신문고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권익위 조사관과 상담한 이동수 씨(정읍시 부여길)는 “정읍시 내장동에 있는 농로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측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에 도로포장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허인선 씨(정읍시 충청로)는 “정읍시 목련아파트 앞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 설치가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정읍시청과 협의해 안전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로 했다. 마을 주민과 함께 찾아온 서남곤 씨(정읍시 정읍남로)는 “2017년에 들어설 아파트 건설사가 노인회관을 사전에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해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권익위는 정읍시가 건설사에게 건립 이행을 촉구하도록 유도하기로 중재했다.

이동신문고

“

이동신문고는 정부와 지역주민을 직접 연결하는 현장 중심 민원 상담제도로서, 앞으로도 고충을 해결할 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돕고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또한 부양 의무를 가진 자녀가 있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에 대해 3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을 보탤다. 이밖에 식사 지원, 생필품 지원, 일자리 참여 지원 등 사회복지·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해 해결책을 찾아주기도 했다. “직장이 폐업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 이동신문고를 찾게 됐다”는 한 주민(정읍시 태인면)은, “시청과 연계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힘써 주겠다는 말에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동신문고는 정부와 지역주민을 직접 연결하는 현장 중심 민원 상담제도로서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고충이 있어도 해결할 길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주민들을 돕고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에 대한 현장 해결과 상담 만족도를 높여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이동신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에 소개된 고충민원의 해결사 이동신문고

정읍시 이동신문고는 YTN TV의 동행 취재를 통해 생생한 현장 내용이 전국적으로 소개됐다. 지난 10월 29일 <YTN 국민신문고> 프로그램에서 ‘찾아가는 신문고’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어 정부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이동신문고의 진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줬다. 방송에서는 민원이 있어도 해결 방법을 잘 모르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고충을 듣고 처리하는 현장 민원처리 제도로서, 민원·민생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번 현장 취재를 시작으로 권익위와 YTN은 앞으로 분기별 1회씩 이동신문고를 동행 취재해 방영하기로 협의했다. 이로써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이동신문고를 널리 알려지고, 국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하는 이동신문고에 대해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눈에 보는 국민권익 주요 사례

부당한 국민권익 침해, 권익위가 앞장서 지켜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권익의 수호자로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도 권익위에 접수된 행정 심판, 고충민원, 부패·공익신고 등의 사례를 통해 소중한 국민권익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전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 고용 인원 확인 없이
산재신고 반려한 것은 부당

Case

개인사업자 A가 운영해오던 전복 양식장에서 중국인 근로자가 고압 수전설비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는 중국인 근로자의 산재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공단은 “A가 제출한 상시 근로자 관련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Solution

권익위는 2~3명의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 양식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특히 일감이 많은 전복선별 작업 시기에는 일용근로자 10명 정도를 추가 고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양식장 규모(2,414㎡)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고용한 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산재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을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했다.



여권에 잘못 표기된 영문 이름,
불편 겪지 않도록 변경 권고

Case

B씨는 대학교 개인정보, TOEIC 성적표, 신용카드 등에 영문 이름으로 'DEOK'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여권 성명란에는 'DUCK'(오리, 책임을 회피하다 등)이라 표기되어 있어 변경하려고 했지만 외교부장관은 'DUCK'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경을 거부해 곤란을 겪었다.

Solution

권익위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B씨의 이름 '덕'의 영문표기는 'DEOK'이고,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을 부정적 의미로 보아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다는 점, 만 30세가 넘는 B씨가 대학교 개인정보, TOEIC 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서 학력이나 경력 증명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교부장관의 변경 거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로 해외 활동 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출입국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외교부장관이 그 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시
실거주 확인 절차 거치도록 제안

Case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평택국제화계획사업을 추진하자 사업지구 내 주택에 거주하던 C씨는 LH에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LH는 C씨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4년 12월 23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해왔다.

Solution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C씨의 주택이 2002년에 사업지구 내에 건축된 점, 전기·전화 요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했고 C씨 자녀의 학적부 상 주소지와 우편물 수신처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을 알아냈다. 또 C씨가 이 사업지구로 전입하기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실상 C씨 가족이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장소인 점 등을 근거로 2002년 1월 6일 이후 사업 지구 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실제 거주했다면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LH에 권고했다.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시정권고

Case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D씨는 2011년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했지만 별이가 시원치 않았다. 결국 2014년 초부터 미용재료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월 어깨 골절상을 입게 되어 산재요양 휴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D씨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입원기간 동안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1년이 지나도록 통원치료 3개월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았다.

Solution

권익위의 조사 결과, D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산재 발생 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권익위는 “산재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형식적 요건보다 실제로 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통원치료 기간의 휴업급여도 지급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가 11월 19일 민간 기업에
청렴정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 공정한 사회로의 동행을
청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참가자들의
진지한 눈빛에서 민간기업 윤리경영의
희망찬 가능성을 보았다.

청렴정책
전수과정 및
기업윤리
워크숍

민간기업과
함께

공정한 사회
추진동력
끌어올린다



민간 기업 임직원에게 ‘청렴정책 전수과정’ 운영
대한민국은 지금 ‘공정한 사회’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기업의 윤리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대한민국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권익위는 기업사회의 반부패 공조 확대와
청렴문화 확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권익위가 민간 기업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11월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2015년 2차 청렴정책 전수과정 및 기업윤리 워크숍’을 운영했다. ‘청렴정
책 전수과정’은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제도 운영 경험을 민간부문과 공유하기 위해 권익위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50여 개 기업의 윤리
경영 및 대관업무담당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
청렴정책 전수과정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으로,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을 소개했다.
”

이번 교육에서는 ▲건전한 대관 문화 조성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
법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주요내용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박정희 사무관은 이날 ‘청렴도 진단모델 및 분석
기법’을 설명하면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권익
위는 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를 청렴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대외적으로 공표하는데, 측정대상 기관의 실질적인 청렴도 개선노
력을 유도할 입체적, 종합적 분석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한
층 세밀해진 청렴도 측정모형은 중전의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물
론 정책고객평가(부패인식·통제·경험지수)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에 따른 감점까지 평가에 반영돼 주목받았다.
뒤이어 윤리경영 특강에 나선 장영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리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더들의 지원과 모범적
윤리행위 ▲윤리와 조직목표, 사업과정의 통합 ▲윤리가 기업 성과관
리 및 채용과정, 선발기준의 일부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하며 민간
기업 경영진 및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익심사정책과
주영희 서기관도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소개하며 “기업 내부에
서도 사소한 부패부터 하나씩 근절한다는 생각으로 윤리경영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사회 반부패 공조 확대, 새로운 희망으로 가는 길
한국의 부패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고도성장 속에서 윤리문제를 소홀히 여긴 결과로, 부
정부패가 있더라도 성장만 하면 된다는 성장제일주의, 기업도 이익만
내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이익우선주의가 빚은 부끄러운 단면이다.
이는 한국에 대한 대외 신뢰도는 물론 한국기업과 한국인들의 글로벌
진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반
부패 정책을 발전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
도록, 권익위는 기업 안팎에서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다
양한 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청렴정책 전수과정에 이어 워크숍 참가자들은 윤리경영 선도기업
과 후발기업 간 벤치마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청렴연수원의 청렴콘
서트를 관람, 반부패 윤리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기업시민 한
명 한 명이 원칙을 지켜야 기업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공
정한 사회 구축’에 다같이 두 소매를 걷어붙이기로 다짐했다.



중고차 똑똑하게 구입하려면 확인 또 확인은 필수!

중고차 구입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에게 적합한 차량을 찾는 것부터 실제 매물 확인과 시운전, 그리고 계약에 이르기까
지 신경 써야 할 것 투성이다. 그런데 정확한 차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
하는 업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권익위에서는 11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표시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차량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매매중개인은 27만 원
을 들여 차량 범퍼를 단순 수리한 것 외에는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하자가 있는 것 같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하니 트렁크 수리, 범퍼교환
등에 250만 원이 들어가고, 차량 천장의 경
우 뜯어보기 전에는 수리비용이 얼마가 나올
지 알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매매중개인은
나몰라라 배짱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2015년 3월

중고차를 구매할 당시에 성능·상태점검기
록부를 봤을 때 분명 무사고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주행 중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 자동차 정비를 맡겼는데,
사고차량이라고 하더군요. 발급된 문서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2014년 10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본 중고차를 구매하
기 위해 매매상가를 찾아갔더니 매매중개인
은 사려고 했던 차량은 보여주지 않고, 다른
차량만 보여주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구매하
지 않겠다고 하자 가지 못하도록 하고는 협박
에 욕설까지 했습니다.

2015년 2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관청은 중고차를 발
견하고 매매상가에서 550만 원을 주고 계약
을 마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매매중개인은 차량에 저당이 잡혀 있
다며 700만 원을 더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
다. 너무 황당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니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
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통에 싸움이 날 뻔했습
니다.

2015년 4월

중고차를 구입해 주행하던 중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전 차주에게 연락했더니, 400
만 원이나 깎아줘서 고쳐주기는 어렵다는 답
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량을 살 때
200만 원밖에 할인혜택을 보지 못해서 확
인해보니, 중개인이 전 차주와 저를 속이고
200만 원을 착복한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015년 10월

중고차를 구매 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다른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요구했으나 매매
중개인이 거부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
원을 제기하니 권한이 없다며 종결처리하더
군요. 결국 중고차 수리에 81만 원이 들었지
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 1월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매매단지를 찾아갔
는데, 보여주는 차마다 너무 맘에 들지 않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매매중개인은 지금
까지의 시간보상을 하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하도 무서워서 30만 원을 수고비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악덕 중개인
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
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2014년 12월



중고차 매매 민원, 차량상태 고지 미흡· 허위매물이 가장 많아

중고차 시장은 나날이 커지는 추세다. 2012년 322만 대 규모에서 2013년 330만 대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340만 대 가량으로 커졌다. 올해도 1월~9월까지 267만 대에 이르는 등 중고차 수요가 하반기에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무난히 300만 대 이상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169만 대)의 약 2배의 규모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0조 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서비스의 질은 시장의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851건(월 평균 38건)의 국민신문고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판매자 또는 매매중개인이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허위매물 237건(27.8%), 이전비·계약금 관련 123건(14.4%) 순이었다.

차량 상태 고지 미흡 관련 민원 중에는 고지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139건(41.0%)으로 가장 많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불일치한다는 민원이 80건(23.5%),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고지한 경우가 44건(12.9%),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가 35건(10.3%)이었다. 허위매물 관련 민원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차량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게재하거나 팔 생각이 없는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많았다. 이전비·계약금 관련 민원은 과도한 차량 이전 등록비용이 57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금 반환 거부 54건(43.9%) 순이었다.

지자체 소관 민원은 총 342건으로 부천시 91건(26.6%), 인천 남구 37건(10.8%)·서구 31건(9.1%)·부평구 18건(5.3%), 수원시 14건(4.1%) 등 주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합리한 관행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해를 당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행복 나눔

- 36 **청렴 토크**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꿈꿉니다
- 40 **일상생활 개념노트** 침샘 자극! 바다에서 온 겨울 진미 '굴'과 '매생이'
- 42 **문화 레시피** 손이 공공? 문화생활로 명랑하게 겨울나기
- 44 **똑똑! 생활법률** 알쏭달쏭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법규, 제대로 묻고 살피고 따져보자
- 46 **꼭 알아두세요!** 한눈에 살펴보는 노동개혁 알짜상식
- 48 **ACRC News**
- 50 **독자 음부조만**

글.
이종철 기자

사진.
정준택(fun studio)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꿈꿉니다

단국대 김상홍 명예교수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이자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뿌리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이다. 오늘날 이 말에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국가 개혁의 중요한 원천으로 청렴을 손꼽던 다산의 조선과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산학을 통해 청렴문화를 전파해온 단국대 김상홍 명예교수에게 다산의 청렴사상과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TV를 켜면 매일 같이 터져 나오는 것이 금품수수, 부당거래,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건이다. 이제 익숙해진 탓인지 부패 행위 자체보다 뇌물 액수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위기 중 위기’다. 단국대 김상홍 명예교수는 “견물생심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인간의 자존심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 속담에 ‘신령스러운 용은 맛있는 먹이를 탐내지 않고, 기품 있는 봉황은 새장이 예쁘다고 들어가지 않는다(神龍不貪香餌, 彩鳳不入雕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용은 먹이가 맛있어 보인다고 탐을 내지 않고, 봉황은 새장(감옥)이 아무리 멋있다고 해도 제 발로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용과 봉황 흉내를 내며 고고한 척 하면서 독약이 묻은 먹이를 먹고서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부패 행위가 연연중에 확산되는 성질이 있다는 점입니다. ‘브라질에서 날갯짓하는 나비가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처럼, 부패 행위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 더욱 강한 힘을 갖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청렴 키워드, ‘선비정신’에서 찾다

김상홍 명예교수는 단국대 사범대학 한자교육과 교수로 2010년까지 재직하며 부총장으로, 석좌교수로 교육계에 몸담아왔다. 퇴직 후에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천여 회를 훌쩍 넘는 청렴 특강을 통해 다산학과 청렴정신을 알리는 전도사로서 활동해오고 있다. 교육계에 있을 때도 1984년부터 청렴 특강을 시작했으니 그 기간을 더하면 30년이 넘는다. 권익위 청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공무원 대상의 청렴 교육에 자주 초청됐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발행한 『행강의 선집(2015.7)』에 그의 특강이 소개될 만큼 명강사로도 인정받았다.



“부패 행위는 우리가 모르게 확산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부패행위가 나비효과처럼 현대 사회에 강한 힘을 갖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



▶ 관리가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힌 책으로 1818년 완성된 「목민심서」

“

공직자라면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에 일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직에 대한 아름다운 가치, 명예와 품위, 보람찬 삶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김상홍 명예교수는 공직사회의 반청렴 부패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전통의 선비정신을 제시했다. 선비 사(士) 자를 살펴보면 열 십(十)과 한 일(一)이 합쳐진 글자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열 명이 공부해도 한 사람만 선비(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비는 아홉 명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야 하고, 아홉 명이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행동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만큼 선비는 도덕적으로 아홉 명보다 높아야 한다. 대쪽 같이 고결한 선비정신이 청백리 문화를 탄생시킨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나라에서 청백리로 뽑힌 사람이 110명이고, 태조 이후에 45명, 중종 이후에 37명, 인조 이후에 28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종 이후로는 청백리 선발마저 끊어지고 나라와 백성은 더욱 가난하게 됐으면서 ‘4백여 년 동안 벼슬아치가 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청백리가 겨우 여기에 그쳤으니 사대부의 수치다’라고 한 탄했죠. 벼슬에 나아갈 때와 퇴임할 때 재산이 같으면 훌륭한 목민관이라고도 했지요. 공직자가 부패하고 탐관오리가 많았던 조선 후기, 결국 나라를 잃고 말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상홍 명예교수는 “국가를 통치하는 것과 마을을 통치하는 원리는 같다”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서기 위해 금품·연줄, 그 밖의 온갖 방법으로 관직을 얻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능력보다 벼슬이 크면 눈을 가리게 되어 자신과 국민들을 불행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자는 우리 사회의 굵은 곳을 바르게 펴서 올곧게 하고 다시 굽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막힌 곳이 있다면 뚫어서 시원하게 소통시켜야 하지요. 공직자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백성을 윤택하게, 국가를 새롭게 할 지침 『목민심서』

2016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타계한지 180주년이 되고, 위민정신(爲民精神)으로 점철된 공직자의 바이블인 『목민심서』가 세상에 나온지 198년이 된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회에서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목민심서』에는 사회를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윤리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하나가 오늘날 공익신고와 상통하는 직언(直言)이다. 옛날 조상들은 나라에 중대사가 생기면 상소를 써서 올린 후 돛자리를 깔고 도끼를 등에 메어 임금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부상소(持斧上疏)라고 일컫는 이 말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머리를 쳐 달라’는 의미로, 목숨을 걸고 상소하는 직언이자 충언이었다.



임진왜란 직전 해인 1591년(선조 24년)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신을 보내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고 하자 조헌(1544~1592) 선생은 일본 사신의 목을 베라며 지부상소를 올렸다. 또한 1876년(고종 13년)에 일본과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1833~1906) 선생은 유명한 「지부복궐척화회소(持斧伏闕斥和議疏)」를 올리며 일본 사신의 목을 베라고 광화문 앞에 도끼를 메고 나타났다. 우리 조상들의 서릿발 같이 준엄했던 지부상소의 정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다산의 꿈은 만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만물을 육성하는 것(澤萬民育萬物)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국민행복’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이 꿈은 우리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아젠다입니다.”

그는 요즘 비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너나할 것 없이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어제의 관행이었던 것이 오늘날 범죄가 되는 경우를 숏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전환을 통해 그러한 습관, 관행을 깨트려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라면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에 일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직에 대한 아름다운 가치, 명예와 품위, 보람찬 삶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김상홍 명예교수는 고려시대 대문호 이규보(1168~1241)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공직자는 ‘청백’이 제일이고 다음은 ‘근신’과 ‘겸손’ 일 뿐”이라는 어록을 소개한다.

“이규보의 어록처럼 청렴한 것에 미래가 있습니다. 부패와 동침하면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에게 최고의 가치란 많은 금전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라 흠결 없이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 절대 불변의 진리임을 꼭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후손들에게 빌려온 것인 만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깨끗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는 그의 말이 명징하게 가슴을 울린다.

굴

강추위가 불어 닥치면 제철 맛은 굴이 우리를 유혹한다. 굴은 가을에 살이 오르기 시작해 겨울에 가장 맛있어지는데 어디 맛뿐일까. 개펄과 갯바위에 서식하는 굴에는 바다를 정화시키면서 생긴 타우린과 항아미노산 성분이 가득 차있어 천연 강장제로 불린다. 글리코겐 함량도 겨울이 여름에 비해 10배 이상 많아진다. 맛과 영양이 배로 풍성해지는 굴은 그야말로 겨울 바다의 선물인 셈. 열량도 낮아 다이어트에 좋고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을 겪는 이에게도 좋은 밥상 위 영양제다. 짭조름한 맛도 중독성이 있지만 굴의 매력은 단연 향기에 있다. 굴로 밀반찬을 만들 때에는 간수를 이용해 재빨리 씻어 내야 특유의 향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다.

침샘 자극!

바다에서 온 겨울 진미

RECIPE

탱글탱글 고소한 ‘굴전’

재료

굴 200g(소금 1큰술), 달걀 2개, 밀가루 1/2컵, 참기름 1작은술, 흰후추 1/2작은술, 식용유 1큰술, 초간장(진간장 1큰술, 식초 1작은술, 설탕 1/2작은술)

만드는 법

- ① 연한 소금물에 굴을 살살 흔들어 씻은 후, 껍질을 골라내고 물기를 뺀다.
- ② 굴에 흰 후추와 참기름을 첨가해 밀간을 한다.
- ③ 밀간한 굴은 밀가루에 살살 버무린다.
- ④ 달걀물을 만들고, 밀가루에 버무린 굴을 달걀물에 적신다.
- 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적당히 뜨거워지면, 굴을 2~3개씩 동글게 놓고 노릇노릇할 때까지 지진다.

연일 내리던 가을비가 멈추고 그새 기온이 뚝 떨어졌다. 몸은 점점 움츠러들지만 바람이 쌀쌀해질수록 더 맛있어지는 겨울철 별미가 있기에 혹독한 추위도 그럭저럭 버틸 만하다. 식탁을 감칠맛으로 가득 채워줄, 바다에서 온 겨울 진미를 소개한다.

RECIPE

바다향 가득, 영양 가득 ‘매생이죽’

재료

매생이 30g, 쌀 1/2컵(80g), 물 3컵(600ml), 소금 1/3작은술(1g)

만드는 법

- ① 매생이는 체에 올린 채 물에 담가 흔들어 2~3회 헹군다.
- ② 쌀은 깨끗이 씻은 후 잠길 만큼 물을 붓고 1시간 정도 불린다.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 ③ 불린 쌀은 푸드 프로세서에 넣고 쌀알이 1/3 정도 크기가 되도록 간다.
- ④ 냄비에 쌀을 넣고 볶아 주다가 쌀에 수분이 증발되면 물 1/3컵을 붓고 다시 볶아 주는 작업을 3번 반복한다.
- ⑤ 나머지 물(2컵)을 넣고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 멎근히 끓인다. (쌀이 냄비에 눌어붙지 않도록 중간에 저어준다.)
- ⑥ 매생이를 넣고 주걱으로 저어가며 끓이다가 소금으로 간한다.

매생이

‘바다의 잡초’로 불리며 괄시 아닌 괄시를 받았던 매생이. 지금은 풍부한 맛과 영양을 인정받아 겨울 최고의 별미로 대접받고 있다. 해양수산과학원이 12월의 제철 참살이 수산물로 선정한 매생이는 단맛이 강하고 향이 깊다. 매생이는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는 뜻의 순우리말로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제철이다. 제철 맛은 매생이는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식이섬유 함량이 많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또한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골다공증이나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 촉진에 탁월하며 콜레스테롤 함량을 떨어뜨리니 겨울철, 이만한 음식이 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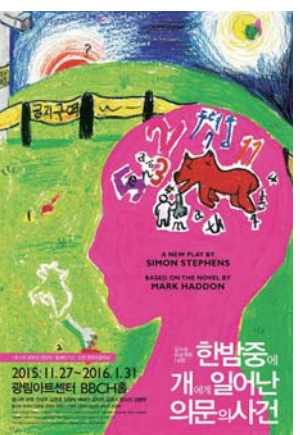
손 이 공 공 ? 문 화 생 활 로 명 랑 하 게 겨 울 나 기

추위가 본격 기승을 부린다. 여유로운 주말은커녕 이불 밖으로 한 발 짝 떼기가 어려운 요즘. 우리의 마음을 데워줄 문화 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연말 공연가에 개성만점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겨울잠만 자기에는 이 계절이 너무도 아쉽다.

DRAMA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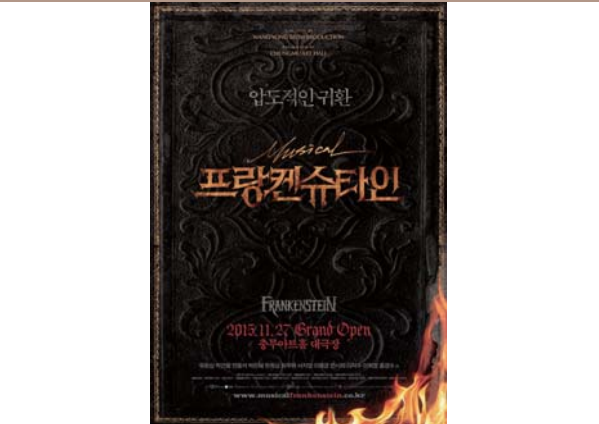
자폐증 소년이 전하는 뜻밖의 감동, 긴 여운
'영국 올리비에 어워드 7관왕', '2014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연극&뮤지컬 부문 통합 1위'에 빛나는 연극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이 드디어 국내에 초연된다. 이 작품은 공연 프로듀서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김수로의 14번째 프로젝트 작품으로 윤나무, 전성우, 려욱, 김영호, 심형탁 등 화려한 캐스팅을 마치며 연극 애호가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 '크리스토퍼'가 이웃집 개가 살해당한 것을 발견한 후 살해범을 추적하는 과정을 담은 이 연극은 열다섯 살 소년의 내면 세계를 그렸다. 특별한 소년이 만드는 예측 불가능한 감동을 느껴보길 바란다.



Information
기간 : 2015년 11월 27일 ~ 2016년 1월 31일
장소 : 광림아트센터 BBCH홀

MUSICAL

프랑켄슈타인



괴물 같은 작품의 귀환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1818년 출간된 영국 작가 메리 셸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순수 창작 뮤지컬이다. 초연 당시 탄탄한 스토리와 강렬한 음악으로 객석을 압도하며 언론의 극찬과 관객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프랑켄슈타인>은 19세기 유럽, 니폴레옹 전쟁 당시 스위스 제네바 출신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전쟁에서 죽지 않는 군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신체 접합술에 능한 앙리 뒤프레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한국 뮤지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등장한 괴물 같은 작품이 올 연말 뮤지컬계를 또 한번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Information
기간 : 2015년 11월 26일 ~ 2016년 2월 28일
장소 : 충무아트홀 대극장

EXHIBITION

알레산드로 멘디니展



디자인계 대부의 상상력을 만나다
이탈리아 디자인계 거장의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 <알레산드로 멘디니展>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고 있다. 여든넷의 나이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알렉산드로 멘디니의 이번 전시는 '동아시아 최초의 대규모 단독 전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제는 '디자인으로 쓴 시(The Poetry of Design)'로 모두 11개의 테마로 구성돼 있다. 생활용품, 가구, 드로잉, 건축물 모형 등 여러 종류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작품 하나하나에 깃든 작가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전시장 내부 디자인에 작가가 직접 참여했다고 하니, 이 또한 놓쳐선 안 될 볼거리 중 하나다.

Information
기간 : 2015년 10월 9일 ~ 2016년 2월 28일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OPERA

카르멘

지독한 사랑의 말로, 크리스마스에 즐기는 강렬한 무대
세계 3대 오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카르멘>이 오페라 팬들을 찾는다.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화려하고 웅장한 음악과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탄탄한 대본이 결합된 이 작품은 풍부한 선율과 다채로운 리듬, 극적인 에피소드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이 후회할 일이 없는 것은 당연지사. 새처럼 자유로운 여인 카르멘이 돈호세를 유혹하기 위하여 부르는 '하바네라', 우리에게 익숙한 '투우사의 노래'를 통해 독특한 매력과 친근감을 선사한다. 정열적이며서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기대된다면,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싶다면 예매를 서두르자.



Information
기간 : 12월 25일 ~ 27일
장소 :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알쏭달쏭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법규, 제대로 묻고 살피고 따져보자



얼마 전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프랜차이즈 한식당 창업을 계획한 A씨.
목 좋은 장소에 점찍어 둔 점포를 임대하려는데,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프랜차이즈 매니저의 말에 고민이 생겼다.
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이고 A씨의 점포에 적용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문의〉

서울 서대문구에서 프랜차이즈 한식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해요. 봐둔 점포가 있는데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법 적용을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제1항 단서). 법 적용을 위한 보증금 상한선은 지역별로 다른데 ① 서울특별시 4억 원, ②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③ 광역시 및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2억 4천만 원, ④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만약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한 후 그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법 제2조 제2항).

A씨의 경우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50만 원이므로 환산보증금은 3억 5천만 원(=2억 원+150만 원×100)이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상한선이 4억 원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똑똑! 생활법률〉에서는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려했을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봅니다. 꼼꼼히 살펴볼수록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법률정보, 사업 성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래 전부터 커피전문점 창업을 꿈꿨던 B씨.
목 좋은 점포 자리를 알아두고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 계약을 하려니
혹시 근처에 같은 커피전문점이 또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B씨가 계약 체결 전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도 문의〉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금과 여유 자금을 모아 커피전문점을 차리려고 합니다. 첫 창업이라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하려고 하는데, 혹시 저의 점포 근처에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들어오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계약체결 전에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계약체결 전 영업지역의 설정 범위 확인해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법 제12조의4 제1항),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본사와 점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의4 제2항). 본사는 계약기간 동안 위 영업지역 내에 동일 업종에 관한 본사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 또는 프랜차이즈 점포를 설치할 수 없고(법 제12조의4 제3항), 이에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B씨의 경우 계약체결 전 설정될 영업지역의 범위가 합리적인지 살펴보고, 향후에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상권에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및 유동인구에 변화가 있어 영업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시행령 제13조의4).

한눈에 노동개혁

살펴보는 알짜상식

지난 2014년, 노사정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에 공감하며 추진한 노동개혁이 긴긴 토론과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노동개혁! ‘지금’이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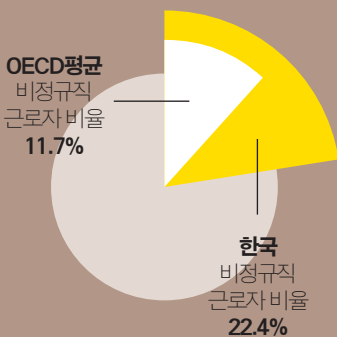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최우선 목표로 한 끝에 역대 정부 최초로 고용률 65%대에 진입하는 성과를 얻었지만, 우리의 노동시장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등 불평등한 근로환경이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장시간 근로 관행, 과도한 연공급적 임금체계, 현장의 불합리한 노사관행 역시 좋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청년들이 ‘고용절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지금,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이 꼽은 노동시장의 문제점

- 일자리 부족 43.1%
-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41.6%

* 국민 1천명 대상 ‘고용노사관계학회 설문조사’(2014년)

비정규직(임시직) 근로자 비율 비교(2013년)



1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이 없는 일터 만들기

노동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며,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

2

일과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근로문화 개선

OECD 국가 중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 근무시간에 비해 낮은 생산성과 가정에서 소외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근로시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및 재량근로시간제 정비, 휴가 사용 등을 촉진한다.

3

스펙이나 연공서열보다 '능력'과 '성과'가 중심이 되는 기업문화

많은 청년들이 실제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아닌,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능력중심채용' 등을 확산시키며,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정당한 임금체계를 구축한다.

대한민국 미래 바꾸는

노동개혁 7가지 혁신!

7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 마련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2·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나간다. 특히 임금·근로조건 격차를 축소해나가고, 대기업·원청과 중소 협력업체 간 성과공유를 활성화한다.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부담은 노사정이 분담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6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제공

취약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수준·대상 등 실업인정 심사 및 재취업 지원에 효율화를 도모한다. 특히 출퇴근재해 보상, 감정노동 업무상 질병인정과 같은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지대를 줄이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

4

고용불안 없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일터 만들기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는 등 직무·성과·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중·장년 근로자가 고용불안 없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된 근로 제도를 정착시킨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 촉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임금직무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중장년희망센터' 역할을 강화한다.

5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및 갈등 해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18)을 토대로 통상임금 제도를 명확히 정의하고, 제외금품 기준을 입법화하며, 노사는 임금구성 단순화 및 지급요건 명확화에 협력한다. 우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노사 간 갈등을 줄여나간다.

이성보 위원장, 주한 파키스탄 대사와 양국간 우호협력방안 논의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10월 21일 세종시 권익위 청사에서 자히드 나스룰라 칸(Zahid Nasrullah Khan) 주한 파키스탄 대사와 만나 양국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서로 소개하고, 한국-파키스탄 우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칸 대사는 11월 파키스탄에서 개최하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권익위는 10월 16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장에서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피해 실태와 원인을 분석해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권익위는 이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책을 적극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권익위는 11월 6일 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7개 시민단체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참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는 권익위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 각 분야 시민사회 단체와 힘을 합쳐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관 협의체다. 지난 해 4월 발족해 현재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참여하는 7개 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이다.

곽진영 부위원장, '울산 공공기관 합동 청렴도 향상 교육' 특강



곽진영 부위원장은 11월 1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주최로 열린 '울산 공공기관 합동 청렴도 향상 교육' 강사로 초청되어 '청렴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강연했다. 이 날 교육에는 울산시청, 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 10개 공공기관 감사 및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곽진영 부위원장은 청렴과 국가 경쟁력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청탁금지법 등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선조들에게 배우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고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시 국도 77호선 공사 관련 집단민원 현장 조정



권익위는 11월 13일 오후 2시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 대회의실에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마을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장, 화성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서 권익위는 화성시 국도 77호선 인근 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통로박스 설치와 농경지 진출입로 포장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했다. 도출된 합의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국도 77호선 신외교차로 주변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통로박스를 설치하고 인근 농경지 진출입로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인수 부위원장은 "도로개설 과정에서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 등이 등한시될 수 있는데 이번 조정으로 마을 주민의 안전과 영농 편의성을 모두 확보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부3.0 찾아가는 행정심판' 개최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한 강원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11월 18일 원주시청 회의실에서 '정부3.0 찾아가는 행정심판'을 개최했다. 이날 행정심판은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다루는 소위원회로써, 청구인이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와 서면자료만으로 진행하는 서면심리로 진행했다. 중앙행정심위는 지난 2011년부터 청사를 직접 방문해 사건을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순회 행정심판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권익을 강화할 계획이다.

독자 퀴즈

아래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업서에 써서 보내주세요!

“행정심판 청구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처분청이나 권익위에 제출하는 서면 행정심판 청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사건 중 운전면허처분 관련 사건, 보훈 처분 관련 사건, 산재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관련 사건 등 청구건 수가 많고 처분청의 업무환경이 뒷받침되는 사건에 대해 시행하는 □□□ □□□□ 청구 등이다. 서면과 달리 인터넷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청구

Hint
〈국민권익〉 11+12월호 〈Special Theme 2〉 기사 참조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지난 호 정답

②, 110

지난 호 당첨자

김정규(경기도 시흥시)

이한나(경기도 성남시)

유은경(대전광역시 중구)

이연희(서울특별시 성북구)

이춘성(서울특별시 구로구)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권익위를 잘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독자의 한마디

김정규 경기도 시흥시	이한나 경기도 성남시	유은경 대전광역시 중구	이연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춘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16차 국제반부패회의〉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정부에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정기관에는 더욱 더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정부패 소식을 전하는 언론을 보면 항상 기승이 갑갑해집니다.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탁하기 전 잠깐, 금품 받기 전 잠깐, 딱 30초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로 공익신고를 보여주는 기사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신고 문화가 점점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용기 있고 양심 있는 분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만 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게 〈똑똑! 생활법률〉에 소개된 원룸 · 보증금 문제가 유용했습니다. 작년에 독립해 원룸에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곧 끝나가는 터라 보증금 문제에 민감했거든요. ‘개인적인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정보, 꼭 기억하겠습니다.	〈글로벌 ACRC〉를 통해 세계와 만나고 소통하는 권익위의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청렴 문화, 반부패 노력이 다른 나라들에게 좋은 본보기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게도 했어요. 늘 권익위와 〈국민권익〉을 응원하겠습니다!



30초만 생각하면 청렴한 세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청탁 하기전 잠깐!
금품 받기전 잠깐!
딱! 30초

청탁금지법이 연고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청탁금지법’이 만들어 갑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 부정청탁 시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

2.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
- 금품등 수수 시 관련자 제재
- 기준금액 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3.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 · 보상

-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 포상금 지급